

비 공 개



의안번호	제 269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7. 21. (제 14 차)

의
결
사
항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7. 21.

1. 의결주문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당)',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의무 등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가 적발되어 「보험업법」 제196조에 따라 과징금 73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며,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의무 등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위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은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에 따라 과태료 149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舊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2항, 제15조(과태료) 제1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제52조(과태료) 제4항 제5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3호,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5호

다. 관계부서 협의

- 제29차(2020.11.26.) 및 제30차(2020.12.3.)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

라. 특이사항 :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일부 지적내용은 추후 조치할 예정

<별지>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삼성생명보험(주)

- 과징금 73백만원 및 과태료 149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 회사는 2015.4.3.~2019.5.15. 기간 중 「OOO OOOOOOOOOOOOO」 등 OOO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데도 해지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음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당)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장애지급률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거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5.6.18.~2019.5.13.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 또는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000 000 000000」 등 0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금 지급내용이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음

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000000000000(0000)」 등 0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보험금 청구일부터 30영업일)인 2017.11.22.~2018.9.28.보다 최소 10영업일~최대 110영업일을 지체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손해사정업자의 조사 지연, 인수인계시 업무누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 (보험금 및 이자 기지급 완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였음

라.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위반

□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2017.6.16.~2019.10.1. 기간 중 아래 ① 및 ②와 같이 총 00,000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사실이 있음

- ① 2017.6.16.~2017.7.25. 기간 중 2006.7.1.~2017.6.30. 동안의 보험금 지급정보를 일괄 제공(재집중)하는 과정에서 입원일수 00,000건¹⁾, 보험금 회수 0,000건²⁾, 질병·재해보험금 지급 0,000건³⁾, 상해급부 00건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거나 누락하였고,
- ② 2017.10.18.~2019.10.1. 기간 중 장해급수 000건⁵⁾(지급일자: 2017.10.17.~2019.9.30.)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였음

- 1) 입원일수 산정시 통원치료비 지급건 중 보험금 회수 또는 추가지급 건에 대해 최초 통원일부터 최종 통원일까지 기간을 입원일수로 잘못 계산하여 전송
- 2) 보험금 회수 유형 중 채권압류, 재지급, 보험사기의 사유로 회수시 전송 누락
- 3) 질병 및 재해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질병보험금 및 재해보험금 항목에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고, 이를 합산하여 질병보험금 및 재해보험금 각 항목에 중복 기재하여 전송
- 4) 상해급부 중 유괴, 납치 등의 사유에 대해 전송 누락
- 5) 보험상품 판매개시일 기준 장해급수 정보를 추출해야 하나 보험계약일 기준 장해급수 정보를 추출하여 장해급수를 상이하게 전송

- 동 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음

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정보처리시스템과 전산실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4.12월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단말기에 대하여 물리적인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9.25.) 현재 사옥관리, 모바일보안, 스토리지, 모바일 CRM, 영업지원 및 웹로그분석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OO대에 대해 Google·Apple·HP·Adobe社, 신문사·블로그 및 물품 구매사이트 등 외부 인터넷에 위치한 서버 OO대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계 HANA DBMS, 망분리(VDI), 개발관련 형상관리, 통신·VPN장비 등 정보처리시스템 OOO대에 운영, 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업무용 단말기(PC) OO대에 대해 외부 인터넷사이트¹⁾와 연결을 허용하는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보험설계사 영업지원 쇼핑몰, 사내교육용 동영상서비스, MS·Adobe·안랩·맥아피社의 사이트 등 외부 인터넷사이트 연결 허용(각 단말기 별로 허용범위는 상이)

□ 동 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였음

관계 법규

I. 보험업 관련 법규

1.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 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③ (생략)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11. (생략)

②~④ (생략)

「(구)보험업법」(2017.4.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 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10~11. (생략)

②~④ (생략)

II. 보험사기방지 관련 법규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생략)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 나.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민사조정법」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	1,000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관련 법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45조(감독·검사 등) ①~② (생략)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 4.~6. (생략)

제52조(과태료)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 (생략)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6.~14. (생략)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4항 제5호	1,000 만원

IV.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④ (생략)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만원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1.~2. (생 략)
-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 4. (생 략)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 1.~4. (생 략)
-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⑥ (생 략)

V. 제재 관련 법규 등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2.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 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 피해가 없는 경우 등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 :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중 :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7.10.19.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3. (생략)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 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7.10.19.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2.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1.~3. 삭제

③ ~ ④ (생략)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생략)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생략)

③ 제1항에 정한 보호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전자금융과	생명보험검사국 디지털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45 02-2100-2975	02-3145-7795 02-3145-7350